

EU 차원의 재정건전화 노력

- EU는 2010년 초반 그리스 재정위기를 겪으며 EU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함을 자각하고, 2010년 5월부터 다양한 재정안정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
- (2010년 5월) EU 유럽이사회는 ‘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(Stability and Growth Pact: SGP)’의 재정지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안 마련
 - EU 회원국들은 기존 SGP 재정준칙인 재정적자 GDP 대비 3%, 부채비율 GDP 대비 60% 규정을 엄수하도록 하고, 이를 지키지 않을시 제재 메커니즘을 가동
 - 재정적자가 GDP 대비 3% 이내인 경우, 예방적 제재가 가동되어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를 운영해야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인
 - 재정적자가 GDP 대비 3% 초과하는 경우, 교정적 제재가 가동되어 기존보다 신속한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벌금부과, EU 보조금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제재 메커니즘은 회원국 다수가 반대투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역 다수결 방식(reverse majority rule) 채택
 - 지난 유럽위기의 또 다른 구조적 원인이었던 일부 EU국가들의 경쟁력 하락 부분은 명목/실질단위로 측정된 노동비용 등의 선별된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 될 것이며, 이 또한 제재가 가능함
- (2010년 6월)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 회원국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(EFSF,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)를 설립하였는데, 이는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
 - EFSF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으로 독일 부채관리기구(DMO)의 도움을 받아 채권 및 다른 금융상품을 발행하며, 회원국들의 지급보증을 받아

4400억유로까지 재원조달이 가능

- EFSM(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) 및 IMF와 함께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동 기구는 2013년 6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
- 2010년 11월 28일,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에 EFSF는 2011-2012년에 걸쳐 177억유로 공급 합의

□ (2010년 9월) SGP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간 예산정책상 긴밀한 공조를 위해 2011년부터 European semester 제도 시행을 승인

- 동 제도는 각 회원국들의 주요 예산 및 구조적 정책을,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정하도록 하여, 경제정책 공조, 예산규율 강화,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
- 매년 3월, EU에서는 직면한 주요 경제적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들에 대해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며, 같은 해 4월, 각 회원국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국의 중기 예산 전략을 검토하고, 고용 및 사회통합 같은 분야에서 취할 정책을 반영하는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, 6월과 7월에 걸쳐 EC에서는 제출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다음해 회원국들의 예산 확정 전에 반영하도록 함

□ (2010년 10월) EFSF가 만료되는 2013년 중반부터 재정위험에 빠진 회원국들에게 구제금융 제공을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영구적인 유럽안정화기구(ESM, European Stability Mechanism) 창설에 합의

- 현재 리스본조약하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할 수 없기 때문에 ESM을 출범하려면 조약 개정이 필요, 이를 위해서는 EU 및 각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
 -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조성된 EFSF는 리스본조약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기구 형태

- EFSF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립되는 상설기구인 ESM은 재정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, 재정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에는 EC, ECB, IMF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동성 제공
 -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그 회원국은 민간채권단과 IMF 규율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계획안을 협상해야 하며, 이후 ESM은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음
 - 2013년 중반부터 유로지역에서 발행되는 모든 국채에 집단적 조항(CACs, Collective Action Clauses)을 삽입하여, 한 회원국이 발행한 모든 국채는 협상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, 채권자들은 다수결을 통해 지불조건 등에 대한 합법적 수정이 가능